對 外 秘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2018. 6. 5.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4. 9. 성 전 회장, 자살 전 인터뷰 및 유서에서 정치인에 금품제공 주장**

☑ 주요 내용 (8인 중 6인은 금액 명시)

▶허태열 전 비서실장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전 리베라 호텔에서 7억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2006. 9.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10만불

▶홍문종 의원 2012년 대선 전 2억원

▶홍준표 경남지사 2011. 6. 한나라당 대표경선 전 1억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원 ▶부산시장 2억원

▶이병기 비서실장에 대해 '내가 뭐 얘기하면 물러날 텐데. 처신을 잘 해야 한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섭섭함 토로

▣ **정국에 큰 파장 예상 ⇨ 파급의 범위와 정도 분석 필요**

- BH 주도 사정정국에서 오히려 **친박 실세 정치인**의 금품 의혹 발생
- 여, 야 정치권은 물론 BH와 검찰·법무부까지 전방위적 후폭풍 예상

▣ **먼저 ①'리스트'를 촉발시킨 사정정국의 경과를 살펴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후 ②당정청을 비롯한 정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③사법부에 미칠 영향 예측을 통해 대응방향을 검토하기로 함**

2. 사정정국의 경과

가. 배경

▣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 3. 12. 국무총리 취임 직후 대국민담화 ⇨ 부정부패 발본색원 의지 천명

☑ 주요 내용

▶① **방위 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

▶②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배임, 부실 투자 등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

▶③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

▶④ **공적 문서 유출**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 행위

● [정치적 함의1] '방위 사업 및 해외 자원개발' 조준 ⇨ 당청 관계 주도권 회복

- **당권을 장악한 非朴계**에 대한 **반격**이자 **親李계**에 대한 **경고**메시지

- ※ 특히 대형 수사의 단골 소재였던 방위 사업 비리와 달리, 굳이 **자원 개발 비리를 명시한 것은 친이계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해석됨

- ①前 정권 치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②현 정권의 도덕성·청렴성을 부각시키며, ③정책면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됨

● [정치적 함의2] '대기업' 조준 ⇨ 경제활성화에 **재벌의 적극 협조 주문**

- 최○○ 회장에 대한 가석방 지연, 조○○에 대한 실형 선고 등으로 **재계가 司正 국면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 활용

● [정치적 함의3] '공적 문서 유출 사건' 조준 ⇨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레임덕 방지**

- 나머지 항목과 무게감이 다름에도 대등하게 나열 ⇨ **공직 사회에 강력 경고**

● ⇨ 집권 3년차 국정동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는 **집권 세력과 차기 세력의 헤게모니 다툼**이 시작되는 시기 ⇨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어젠다 및 대형 수사 기획**

☑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 어젠다' 및 대형 수사 사례

▶**참여정부** ⇨ **대연정** 제안(2005. 7.) + **두산그룹** 비자금(2005. 6.) 및 **론스타** 주가조작 수사(2005. 10.)

- 이후 현대차 비자금 및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로 이어짐

▶**MB정부** ⇨ 세종시 수정안 및 4대강 사업 강행 , 대북 강경제재(2010년 상반기) + **한화그룹** 비자금(2010. 9.) 및 **씨엔그룹** 수사(2010. 10.)

- 이후 부산저축은행 및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로 이어짐

- 특히 현 정권의 경우 **집권 초기 2년간 가시적 성과·업적이 없는 데 따른 초초감·불안감** 있음

- ※ 집권 3년차 카드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개선**도 물밑 준비 ⇨ **MB의 회고록**(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의 거액 요구 폭로), 주한 미국대사 피습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단 포기함

나. 수사 진행경과 및 분석

▣ 방위 사업 비리 수사

● **[외형상 성과]** 담화 발표 당일인 3. 12. 일광공영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 3. 21. 황○○ 전 해군 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등

● **[성과에 대한 비판]**

- 2014. 11. 초대형 규모의 합동수사단을 꾸리고도, 5개월간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나 이미 언론에 알려진 비리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①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육군과 관련된 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음

- ② 3. 29. 이◯◯ 회장의 비밀 컨테이너 등을 확보하고도 **정치인 로비 등 의혹에 관하여 진척이 없음**

▣ 자원 개발 비리 수사

●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첫 타겟

- **[최초혐의]** 자원 개발 명목의 성공불융자금 330억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

- **[영장청구사실]** 분식회계, 재무상태 속여 대출사기, 회사 돈 횡령

● 무리한 기획 수사의 한계 드러냄

- 1 '최초혐의' 의 입증 어렵게 되자 분식회계 등으로 혐의 전환 ⇨ **본래적 의미의 자원개발 관련 비리 수사에 실패**하고, 성 전 회장 자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저인망식 수사로 통상적 기업 비리 성과를 낸 것에 불과

- 2 수사 대상 선별 실패 ⇨ 성 전 회장과 **친박 실세와의 교류를 간과**한 채 성 전 회장을 'MB맨', '자원외교의 상징' 으로 무리하게 낙인찍음

☑ 사설 [청와대 하명 수사 밀어붙이더니 청와대 발등 찍은 검찰] (4. 11.자 조선일보)

'청와대가 하명(下命)하고 검찰은 그 하명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 비리 수사는 장기간 내사를 벌여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경남기업 수사는 청와대 하명에 떠밀려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다른 비리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수사를 밀어붙이다 보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애초 목적과 다른 **별건 수사에 매달리고**, 무차별적 압수 수색을 하게 된다. 조사받는 쪽도 **수사의 정당성을 수긍하지 않고**, 급기야 성 전 회장처럼 자살로 결백을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 대기업 수사

● 담화 발표 다음날 포스코건설 압수수색 등 비자금 수사, 동국제강 및 포스코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비자금 수사 등으로 확대 진행 중

- **[재계압박에는 성공]** 전경련·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임금인상 요청에 대하여 '공동반대성명'을 준비하다가 급거 일정 취소

● 예상

- 동국제강 사건 등은 이미 **4년 전에 이루어진 국세청 조사결과 등을 재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있음

- 신세계 그룹 오너의 70억 비자금설, 동부그룹의 비자금 조성설, 롯데쇼핑에 대한 수사 재개설 등이 검찰발 수사첩보로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면서 재계의 반발 및 검찰의 부담 가중되고 있음

- **정관계 로비 혐의로 신속히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 한 수사 위축**될 가능성

☑ 대기업 수사 관련 (3. 30.자 일요신문)

'**포스코건설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스코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검찰로서는 당분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어 새로운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前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

● **박○○ 전 교육문화수석**의 외압 및 비리 관련 수사 ⇨ 두산그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 **[한계]** 前 정권 핵심실세로 보기는 어려움 ⇨ **현 정권의 도덕성 부각 효과 미미**

3. '성완종 리스트'가 미칠 영향 분석

가. 기본 전제 : 리스트의 신빙성과 쟁점 분석

▣ 신빙성 ⇨ 상당함

● **부합하는 정황** 속속 드러남

- 전달 장소, 일시,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실제에 부합함 (ex: 김기춘 전 실장은 2006년 당시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음(대선 바로 다음날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인 정몽준 바로 뒤에 자리함)

- 명단 중 유일한 非朴 인사인 홍준표 도지사 부분 ⇨ **전달자가 사실상 시인**

> **☑ 홍지사 1억원 수수 관련자 반응**
>
> ▶ 홍지사 '나는 받지 않았지만, 돌아가시는 마당에 내용이 **허위나 음해라고는 생각 안 한다**. 측근을 빙자해 받을 수 있다'
>
> ▶ 윤○○ (2010년 당시 홍준표 당 대표 경선 캠프 공보특보)
>
> - '(성 전 회장이) 말씀하신 마당에 **내가 틀리다고 할 수 있겠느냐**'
> - 검찰 출석 및 **진술 협조 의사 밝힘**
> - 언론에서 '홍준표 캠프 출신 윤○○씨'로 소개되는 인물로서 동아일보 차장 출신,
> 경남기업 부사장 및 2011년 서청원 당 대표 경선 캠프 공보실장 역임
> - '친박 1095일' 등의 저자로서 **친박계 내부 정보에 밝음** ⇨ 추가 폭로 가능성

● 객관적 진실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 드러나더라도 자살 전 발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적 의혹은 가라앉기 어려움

- 야당 문재인 대표 '허태열, 김기춘 두 분이 정말 **왜 연이어 비서실장 됐는지 이유가 드러났다**'

- 성 전 회장의 측근을 인용해 '정치자금 150억원 규모' 라는 기사 등장

▣ **쟁점의 확산 : 친박 실세 비리 ⇨ VIP 대선자금 문제**

● 4. 10. 공개 당일 '친박 실세들의 정치자금 의혹'

● 4. 11. 경향신문, '201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녹음파일 공개 ⇨ 공소시효 등 수사 장애물 사라지고, 대선자금 뇌관 건드림

▣ **지속적 확산 가능성**

●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의 **50분 분량 인터뷰 녹음파일 보유** ⇨ 현재 이틀에 걸쳐 각 3분 분량만 공개

- 폭발력이 큰 대선자금 부분을 서두르지 않고 둘째 날 공개하는 등 단계적 활용 전략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품 전달시 수행하였다는 경남기업 직원 등에 대한 집중 취재 예상

- 윤○○ 부사장의 태도 및 언론이 묘사하는 성 전 회장과 직원들의 끈끈한 관계 등에 비추어 추가 폭로 가능성 있음

● 새로운 '리스트' 현출 가능성 ⇨ 이른바 **'3대 리스트' 문제**

- 사정정국의 3대 타겟인 방산비리/자원외교/대기업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아래 리스트 거론 ⇨ 사태 추이에 따라 새로운 리스트 드러날 가능성

- 1방산비리 관련 일광공영 **'이○○ 리스트'**

- 2자원외교 관련 경남기업 '성완종 리스트'

- 3대기업 관련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 리스트'**

나. 對BH 영향 분석 ⇨ 국정 장악력 및 주도권 상실 우려

▣ **치명적 부담**

● **[의혹의 대상 측면에서] ⇨ 사실상 VIP 겨냥**

- **현 정권 1~3대 비서실장** 모두 포함

-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 과정의 친박 핵심 인물 대거 포함
- 사실상 VIP를 겨냥한 의혹임

● **[의혹의 내용 측면에서] ⇨ 정권의 도덕성 및 정통성과 직결되는 금품 및 대선자금 문제**

- 현 정권의 가장 큰 자산은 역대 정권에 비해 **우월한 도덕성과 VIP의 청렴·진정성**에 있다는 것이 보수언론의 평 ⇨ 이번 사정정국 드라이브 역시 도덕성에 대한 자신감에 근거함
- 정권 출범 후 금전비리나 정치자금 논란 없었음 ⇨ 성완종 리스트는 **최초의 금품비리**일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대선자금 의혹**임
- ⇨ 도덕성에 대한 신뢰 손상 및 금권 선거 논란으로 **국정지지율 급락 위험**

▣ BH 반응

● **표면적 반응** ⇨ 사태 초기 확산 방지에 총력

- 사건 당일, **언론 접촉을 극히 꺼리던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하여** 3명의 전, 현직 실장 모두 언론에 직접 적극 해명
- VIP, 사건 이틀만인 4. 12. 대변인 통하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 는 성명
- **※ 위기 정면돌파를 선호하는 VIP 성향상**, 신속히 정면대응한 것으로 보임

● **내부적 반응**

- 30% 이하까지 떨어졌던 국정지지율이 40%로 겨우 회복된 상황에서 최악의 악재 발생으로 인한 대혼란
- 최근 **노사정 대타협 좌초, 공무원연금개혁 부진에 이어 재보선 참패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3년차 국정동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

> **☑ BH의 트라우마**
>
> **청와대 비선 개입 의혹** 관련, 검찰수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여 국정주도권을 장기간 상실하였던 경험
> ⇨ 이번 리스트 역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국정동력에 치명타**가 될 것

- **집권 2년차**를 세월호, 연이은 총리후보자 낙마 등 인사난맥,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등으로 **허비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 ⇨ 3년차 국정주도권 상실에 대한 염려 ⇨ **'특별한 업적 없는 정권' 으로 임기 마칠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 향후 대응 예상

●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능성

- 정윤회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 발언 등으로 가이드라인 논란 ⇨ 자기 확신이 강한 VIP 성향에 비추어 '대선자금과 무관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일' 이라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상존(단 시기, 형태 및 수위 조절할 것임)

● 3년차 **골든타임 포기 不可 판단시 ⇨ 국면전환 카드** 뽑아들 가능성

- **기본적으로는 대선자금 문제와는 선을 그으면서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올 하반기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임기만료까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초초감 ⇨ 반전을 노린 강력한 카드** 활용할 가능성

  ▪ ex) 남북 관계 대형 이슈, 개헌 논의, 여야 대선자금 전면 수사 등

☑ 선례1 NLL 논란 카드 활용

▶ 2013. 6. 14.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로 정권 정통성 논란 ⇨ 2013. 6. 24. 국정원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로 'NLL 포기 발언' 여부 쟁점화**

▶ BH, 수세를 벗어나 공세로 전환

☑ 선례2 대선자금 수사 관련 선례 분석

▶ 2003. 12.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02년 대선 당시 우리가 쓴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의 **1/10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 발언

- 2004. 3. 검찰, '한나라당 823억원, 민주당 114억원의 불법대선자금 모금' 발표

- 송○○ 당시 검찰총장 퇴임 후 강연, '검찰이 10분의 2, 3을 찾아냈더니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다' ⇨ 수사결과 통제·축소 의혹

▶ BH 입장에서의 시사점

- VIP가 야당에 비하여 주요 언론과 여론의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야당의 대선자금 역시 쟁점화** 시도 가능

- 성완종 리스트 폭발력 희석 및 정국에 침착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 확보 가능
- 검찰 수사에 지속적인 관여를 통해 불리하지 않은 수사결과 통제 시도 가능성

●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역할 ⇨ 유지

- 리스트의 다른 친박 인사와 달리 금액 언급 없음
- **非朴계 여당 인사의 발언권이 높아질 상황에 대응**하여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민정수석**의 역할 ⇨ 책임론 가능성

-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사실상 기획하고, 수사대상자를 컨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음
- ※성 전 회장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2012. 11.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을 통해 중앙선대위에 합류한 것 등에 비추어 대선과정에서의 성 전 회장의 역할 및 친박계와의 관계에 관해 오판하였을 가능성 엿보임
- 민정수석에 대한 VIP의 **신뢰에 비추어 문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언권과 위상 다소 위축될 가능성** 있음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보다 **법무부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 있음
- ⇨ 민정수석실의 성향상 실책을 만회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기획수사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對여당 영향 분석

▣ 표면적·형식적 영향

●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 우려

▣ 내부적·실질적 영향 : 계파별 이해관계 극명 대비

● **친박계** ⇨ 패닉, 당분간 **활동 위축** 불가피

- 친박계 인사가 등장하는 **추가 폭로 및 리스트 염려** ⇨ Y, K 의원 등 친박계 다른 여권 실세가 성 전 회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됨

● **비박계 ⇨ 발언권 강화** 시도

- 당청 관계에서 당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성완종 리스트의 최대 피해자가 VIP라면, 최대수혜자는 김무성 대표’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1친박계와 달리 김무성, 유승민 대표는 성 전 회장의 서산 빈소를 직접 방문하고, 2김무성 당대표가 **청와대 의견 표명에 앞서** 4. 12. **독자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만 보고 철저히 수사**할 것’ 을 촉구하면서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 고 한 것도 같은 문맥으로 보임

● 친이계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등 역공

- 친이계를 노린 기획수사에 대하여 강력반발하고, 부메랑 효과를 경고해 옴

- ①친박계에 대한 역공 필요성은 물론 ②리스트 수사 미진할 경우 재보선 및 내년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 초·재선 및 쇄신파 의원

- **재보선 결과 등에 따라 조기에 BH와의 선긋기에 나서는 계기**가 될 가능성 있음

▣ 향후 대응 예상

● 표면적 대응

-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 여당과 BH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수 밖에 없음**

- 재보선 승리 위해, **‘리스트’ 이슈 희석 및 지역 발전 문제와 인물론에 총력**

● 내부적 대응

- 계파간 갈등 심화되면서 **내년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물밑 다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임

라. 對야당 영향 분석

▣ 표면적 반응

- 4. 10. '친박 게이트 대책위' 발족(위원장 전병헌 최고위원), 진상 규명을 위해 당력 집중 ⇨ 단, **여권표의 逆결집 역풍을 우려해 재보선 전략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자제**할 방침

- 선거의 유불리 보다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스탠스 유지

▣ 내부적 반응

- **야권표 집결 및 야권단일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 ⇨ 4. 13.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슈화 지속

- 성 전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별 사면 전력 및 충청권 야당의원과의 깊은 친분 ⇨ 야당 의원에 대한 금품제공 폭로되거나, 여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에 촉각

마. 4·29 재보선 영향 분석

▣ 재보선 4개 선거구 전반 ⇨ 젊은 층 투표율 제고 및 야권표 결집으로 야당득표율 상승

- 주요 선거구에서의 야권 분열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 투표율 저조 예상 ⇨ **성종완 리스트를 계기로 젊은 층의 높은 관심**

- 단, 기존 여당 우세지역인 인천 강화을, 성남중원 ⇨ 특히 성남중원에서 여당이 다소 고전할 가능성 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광주 서구을 ⇨ 천정배 선두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서울 관악을

☑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 혼전**

▶ **4. 5.자 휴먼리서치 조사결과 (ARS, 응답자 706명) ⇨ 정동영 2위**

- 5자 대결시 (무소속 및 정의당 포함)
  새누리당 오신환 43.8%, 국민모임 정동영 23.5%, 새정치연합 정태호 17.8%
- 3자 대결시
  새누리당 오신환 46.2%, 국민모임 정동영 27.4%, 새정치연합 정태호 21.4%

▶ **4. 5.자 조원씨앤아이 조사결과 (ARS, 응답자 563) ⇨ 정동영 3위**

- 새누리당 오신환 43.7%, 새정치연합 정태호 24.9%, 국민모임 정동영 19.9% 등

● 성완종 리스트를 계기로 **야권 단일화 압박 증대 예상**

- **단일화시 야권의 승소 가능성**이 이번 리스트를 계기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범야권 및 시민단체의 **단일화 압박 증대**

- 단일화 가능성은 안개 속 ⇨ 1현 정권에 대한 대선자금 공격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새정치연합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 있으나, 2'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을 내세우는 정동영 후보가 현재와 같은 지지율 분포 상황에서는 양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바. 對법무·검찰 영향 분석

▣ 표면적 영향 ⇨ 기본적으로 법무·검찰 득세 계속

● 4. 12. 청와대 발표에 맞춰 신속한 특별수사팀 구성 ⇨ 엄정한 수사 의지 표명

- 특별수사팀장 문○○ 대전지검장

- 특검 또는 특별감찰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 성과 도출 노력 예상

● 기존 자원외교 수사에 대하여도 지속 수사 방침

- 실제로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적절한 출구전략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성 전 회장 자살과 관련하여 별건수사, 압박수사 등의 논란이 있으나, 야권은 BH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여권과 BH 입장에서는 검찰을 문책하기 어려울 것**임

> **☑ 자원외교 수사 실패론 (4. 10.자 내일신문)**
>
>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자원외교 비리 수사 실패론이 거론되고 있다. 공기업 수사가 쉽지 않은데다 **권력형 비리에도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융자금 특혜와 로비 정황이 나오지 않고 **일반 기업비리로 결론나면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허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였다'

▣ 내부적 영향

● **법무부 장관 역할 증대 가능성**

- 극도로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한 수사인 점과 BH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높은 신뢰에 비추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예상**

● 종전 사정정국에 비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부담스런 수사 ⇨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 및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로 외관상 균형을 맞출 가능성**

● 참고사항 : 김○○ 검찰총장 임기 2015. 12.까지 8개월 남음

4. 對사법부 영향 및 대응방향 분석

가.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 영향 ⇨ 부정적

▣ **1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

● 입법부 및 BH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성완종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의 이슈에 **압도될 가능성** 큼

● **상고법원 등의 이슈**가 ①현재로선 **여론**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은 아니고, ②**국민 실생활**에 당장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정치권 인식도 미흡**하기 때문임

● 급박한 정치지형하에서 합리적인 장점 설명 및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

▣ **2법무·검찰이 국정의 중심에 위치 ⇨ 사법부 영향력 상대적 약화**

● BH와 여당 모두,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진행 중에 검찰이 반대하는 입법안에 찬성할 가능성 낮음**

● 수사종결시까지 상고법원 관련 법무·검찰 **설득창구 가동에 어려움**

나. BH 국정장악력 저하 상황을 이용한 돌파 전략 검토

▣ **상고법원안 처리 지연의 배경에는 BH·법무부의 반대 기류가 자리잡고 있음 ⇨ BH 및 여권의 국정장악력 상실로 인한 眞空 상태 활용할 필요**

▣ 국정장악 공백 활용한 돌파 전략

● 정세 분석 ⇨ 특히 리스트 수사 후폭풍 등으로 정국 혼란상황인 경우

- 1BH는 '성완종 리스트' 및 이어지는 대선자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 국정장악력 및 추진 동력이 크게 감소될 가능성 있음

- 2법무·검찰은 리스트 및 대선자금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에 관한 여·야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제기에 시달릴 것임

- 3다수당인 여당의 경우 권력의 무게중심이 BH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친박계로부터, 리스트 의혹에서 보다 자유로우면서도 미래 권력을 노리는 김무성 당대표 및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로 보다 더 이동할 것임

- 4김무성 대표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추구하고, 이에 자부심을 갖는 스타일이므로, 사법부 구성(통치구조)에 관한 중요한 개선방향인 상고법원안에 관하여 김대표에게 주도권과 결정권을 제안하는 듯한 형태로 접근할 여지 있음

● [공략포인트1] 법사위원, 나아가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 설득작업을 지속·강화하여 본회의 통과 시도

- BH 및 여권의 국정 장악력 상실로 인한 眞空 상태에서 각개 격파를 통해 일부 적극 찬성 의원의 견인하에 다수 우호 내지 부지 세력의 묵인으로 법안 통과 시도하는 전략 모색

- BH로부터의 하달식 법안처리에 거부감 있는 의원들의 경우 BH 장악력 저하시 자율적 판단·의결 욕구 증가 가능성

- 이미 법안 발의 단계에서 168명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경험 있음

- 적극적 지지세력을 추가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단순한 우호세력 내지 반대하지 않는 세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함

● [공략포인트2] 김무성 당대표 및 유승민 원내 대표 위상 강화에 따른 전략

- 금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서 승리를 이뤄낼 경우 김무성 대표의 위상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非朴계로서 금번 스캔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김, 유 대표 상대 집중 설득 작업** ⇨ (김무성 대표의 적극 찬성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반대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또는 묵시적 찬성 당론을 유도하는 방안

- 상고법원안에 관한 김무성 대표 설득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 있음

- BH와 무관한 **김무성 대표의 독자적인 작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

> ☑ BH와 여당의 입법 주도권 관련 갈등 (3. 3.자 미디어오늘)
>
>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BH)는 **여당 의원을 동원한 입법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떨어지면서 **새누리당이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와 다른 방향의 세재개편을 언급한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당의 잠재적 후보들이 즐비한 가운데 **비박계로 이루어진 지도부를 압박하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간다면 집권 3년차 정부(BH)와 여당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집권 3년차 때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 **검찰 출신 의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법사위 1소위 돌파 전략에 관하여는 추가 검토 필요**

다. 상황별 구체적 영향 및 대응방향

▣ 4. 20. 법사위의 상고법원 공청회

● 법사위 개최 공청회이므로, 리스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들의 참석 및 어느 정도 관심 예상됨 ⇨ **기존 설득 및 홍보작업 지속·강화**

● 형사사건의 최종 판단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여당을 상대로는** 상고법원안에 의할 경우 ①일반 형사사건은 정치인 사건이라도(ex: 한명숙 사건) 상고법원에서 신속히 처리되고, ②국가의 근간에 관한 사건은(ex: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칙적으로 판단되게 된다는 장점을 비공식적으로 어필할 필

요 있음

▣ **상고법원 관련 對BH 설득창구 ⇨ 당분간 확보에 어려움**

- 비서실장 및 특보단에 대한 신속한 접촉 및 설득에 당분간 어려움 예상됨 ⇨ **6월 임시국회** 등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여** 특보단을 통한 우회전략은 지속적으로 시도할 필요
- 언제든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 확립 ⇨ 검찰·법무부가 리스트 수사 정국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무리수를 두는 등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므로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하고 있어야 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본회의 절차**

- 재보선 결과 및 대선자금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입법 주도권을 일정 부분 확보할 여지가 있는 여당 김무성, 유승민 대표 최대한 설득하여 (적어도 **묵시적**) 찬성 세력으로 확보할 필요
- BH, 여·야, 법무부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 노력 지속

▣ **리스트 관련 수사진행 과정 및 재판 절차**

- 정치적 수사로 인한 **무리한 영장청구 및 기소에 따른 후폭풍** ⇨ 법원의 **부담 예상됨**
- 특히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 기울일 필요 있음

라. 對BH 및 對입법부 협조 및 우호관계 유지 방안

▣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협조 방안 ⇨ 당분간 한계**

-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

▣ **이미 계속 중인 주요 관심사건 처리 ⇨ BH측의 입장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로 우호적 관계 유지**

☑ 최근 관심 판결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판결
▶ VIP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한 판결

● '검찰권의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 최근 BH 관심사건 (○○○○ 2015가단5075370, 재판장 김○○ 부장판사)

▶원고 조○○(**전 세계일보 사장**)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 2015. 3. 26. 소제기

▶**부당해임**으로 인한 잔여임기 보수 상당액 195,988,630원 청구

▶청구원인

- 2014. 11. 28. 세계일보 1면으로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고 단독보도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 1. 21. 통일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 김○○ 통일교 총재비서실장은 원고를 불러 "**정부 요인이** 2015. 1. 29. 통일교 한○○ 총재 측에 전화를 걸어 '**원고를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해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설명

- 다른 언론사와 달리 피고가 2013, 14년에 흑자 달성한 것은 원고의 경영능력덕분임에도 원고는 '정윤회 문건' 보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것이고, 이는 **정부 측이 재단측과 통일교를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